

##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

## 장소 변경 '일석 삼조'

박용근 도의원 "예산 절감·산업연구용지 등 매립비용 절감·개발 가능 등 효과"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설치 장소 변경으로 약 35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1단계 준설비용 약 3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산업연구용지 등 매립비용도 절감하고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박용근 의원(장수)의 도정질문에서 밝혀졌다.

박용근 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 1, 2단계 사업 배치도의 '굴곡진 부분'에 주목하고, 1989년도 위성사진부터 2007년과 2014년 등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의 변화하는 위성사진을 제시하며, 약 350억 원의 막



대한 준설비용이 투입되고, 기간 미료 후 다시 산업연구용지 등 육지생태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투입된다며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를 변경하면 동시에 준설과 매립비용을 절감하고 산업연구용지 등 육지생태 개발이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강물이 흐르는 곳에 토사가 쌓이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며 "새만금종합개발계획도 소요 매립비용 7.1억 원 중 약 5.7억 원을 허

/김경수 기자

## 진보당 도당 "고금리 이자장사, 이제 그만"

"전북은행, 7월 예대금리 차 6.33%로 부산은행보다 7배 높아  
금융상품 가입 강요 '꺾기' 행위도 대구은행 다음으로 많아"



7월 시행된 예대금리차공시제도에서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이 전국은행 중 가장 큰 예대금리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정치권에서 금리인하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오은미)은 18일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시대에 서민들은 빚을 내서 빚을 갚은 악순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은행과 정유사들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얻고 있고 특히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이 전국은행 중 가장 고금리로 서민들의 힘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7월 발표된 은행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전북은행의 7월 가계 예대금리차는 6.33% 포인트로 최저인 부산은행(0.82%)보다 7.72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8월에는 5.66%로 소폭 하락했으나(5.66%) 여전히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당은 "전북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틀어 최고의 이자장사를 펼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빙스텝으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 틈을 악용해 예대금리차 마진, 고금리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은미 도당위원장은 포함한 진보당 전북도당 당원들이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강성희 민생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도당은 "전북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도 대구은행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보당 전북도당은 "민생을 보호하고 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와 정당의 본령이다"며 "민생 특위를 출범시켜 지방은행의 취지를 벗어난 전북은행의 고을의 예대

금리차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전북은행 대출금리 인하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당은 "전북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서명운동, 전북은행 본점과 지점에서의 1인시위와 추후 정당연설회도 진행해 '서민을 올리는 고금리 이자장사'를 중단시키고 전북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실현하겠だ"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규제 탄력조정 필요"

"전북, 민식이법 시행 이후 안전 위한 사업들 시행돼"



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염 의원은 "전라북도의 경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의 인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시

행됐고 법 시행 이전에 비해 획기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파속카페라 설치

/김경수 기자

## 염영선 도의원

현황으로 보면 2017~2019년에는 3년간 총 27대가 설치된 반면 2020~2022년 8월까지 총 872대가 설치돼 약 32배 증가했다.

염영선 의원은 "일명 '민식이법'이 여론에 밀려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일방이고 획일적인 측면이 많았다"며, "최근 경찰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시도가 있는 만큼 전라북도도 관련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 교통약자 여객선 이용 '그림의 떡'

작년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37.8%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12.3%

민주 윤준병 의원 "설치율 향상 지원대책 마련 나서야"



도서지역 주민과 섬 관광객의 이동을 담당하는 공공교통의 한 축인 여객선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 있는 여객선은 총 164척이었다.

그러나 지동내내시설·전자문자 안내판·휠체어 승강설비·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장애인 전용화장실 등 여객선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37.8%로, 철도(98.9%), 도시·광역철도(96.0%), 버스(90.0%)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복별 기준 적합 설치 현황을 보면, 절반 수준 또는 절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여객선의 휠체어 승강설비 기준 적합 설치율은 58%였으며, 이어 출입구 통로 55.9%, 장애인 전용화장실 47.0%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접근기능 표시 12.3%,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23.7%, 자동내내시설 27.1% 순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았다.

지역별 기준 적합 설치 현황도 50%

도 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제, 제주지역(제주지방해양수산청, 9 척)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47.4%로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반면, 미산지역(미산지방해양수산청)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27.3%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한편 여객선에 대한 민족도 현황을 보면 교통약자는 안내시설이 7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교통용자는 '승무원 친절성'이 79.5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여객선 및 여객선 터미널의 전반적 민족도는 교통약자 61.7 점, 비교통용자 76.4점으로 조사됐다.

윤준병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여객선의 이용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은 30%대로 타 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박의 특성상 운행 및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즉각적인 시설개선이 어려울 수 있지만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 접근기능 표시등 용이하거나 시급한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여객선은 공공교통·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 도서지역 주민과 섬 관광객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교통약자 증대 및 해양관광 확대에 대응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약자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1,550만 9천명으로 총인구 대비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기준 적합 설치 현황도 50%

도 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정읍=김대환 기자

서북·김홍희 구석영장 청구에 민주 "망신주기 기획작품"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이 서북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덮어두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 "정치보복을 위해 안보를 거둘내는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다.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 까지 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장관과 김 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나. 현직에 있지도 않은 자연인 신분인 장관과 청장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기는 하다"고 되풀었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주겠다는 심산"이라 지적하며 "벌써 다섯 달째 런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갖고 와서 얘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 모욕주기도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명예를 아는 분들이다.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도주할 일도 없다"며 "법원의 혁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해 공공원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북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급 인사의 신병회복에 나섰다.

/뉴시스

## 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회가 열렸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8일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활동, 촉구 건

의,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앞으로 특위의 주요 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동계획안을 확정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김경수 기자

보다나은 kr+ 축! 전주매일 창간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을 경영합니다

농어촌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우리 농어촌.

어제의 농어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오늘의 농어촌이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들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일

농어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충수 및 유기증리사업

농지은행사업

개발사업

지체 및 해외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세만금사업단